

제 1과 목 : 노동법 1

1.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②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④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 ⑤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3.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 ①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
- ②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③ 근로자의 과반수
- ④ 근로감독관
- ⑤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②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④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행해지는 시점을 말한다.
- ②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이다.
- ③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 ④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
-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法理)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6.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그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 ④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 ⑤ 사용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
- ②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 ③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운송회사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제도는?

- 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 ②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2항)
-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④ 외근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 ⑤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며 직종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인 자를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10.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수 없다.
- ②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③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④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⑤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그 근로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1.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 ②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 ③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양수기업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 ④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고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
- ⑤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을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②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 ④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 ② 정리해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15.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 ④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직업안정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 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③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에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④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5.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주택자금에 대한 융자
- ②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③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
- ④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운영
- ⑤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 2과 목 : 노 동 법 2**

1.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 ②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 ③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 ④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②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 ③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 ④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 ⑤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만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
- ④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8.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 ②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과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후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 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된다.
-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직전 또는 개시한 직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 ⑤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0.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분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그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③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만료시에 그 협약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⑤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더라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친다.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용자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된다.
- ④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 ⑤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게 해당된다.

13.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된다.
-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③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 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가 과대하여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14.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 ②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 ③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 ④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인정할 의무가 있다.
-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입은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20.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② 단체협약상 유니언 슝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 ③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 ④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22.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 ②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 ③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권
- ④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
- ⑤ 긴급조정의 결정권

23.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노사협의회의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2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재를 한다.
- ②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응해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및 제3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은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5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 3과 목 : 민 법

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공인노무사 甲에게 고용된 乙이 제3자의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러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丙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다.
  - ③ 丙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甲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 ④ 甲이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제3자 丁과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의 책임비율 이상을 丙에게 배상하였다면 丁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 있다.

3.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②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 ⑤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 ②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③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 ②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③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⑤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6.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乙이 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 ③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 ②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③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③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④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 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③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 ⑤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③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 자(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 ②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③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⑤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16.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 ②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⑤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18.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②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 ③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登記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 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2 :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 중 丙이 무자력이고 丁은 戊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甲이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丁·戊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 ①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                      ②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 ③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④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 ⑤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21.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 ②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22.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②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 ④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3.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 ① 해제                      ② 추인                      ③ 유언                      ④ 취소                      ⑤ 상계

2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 ④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 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5.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① 직무의 분할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②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③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④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 ① 3년 6개월    ② 4년                    ③ 5년                    ④ 5년 6개월    ⑤ 7년 6개월

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일 것

7.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②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
- ⑤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8. 甲은 2000년 3월 1일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A회사에 입사하였다. A회사는 2000년 4월 1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甲은 2011년 5월 1일에 이직하였고, A회사는 2011년 5월 15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순서대로 된 것은?

- ①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1일                      ②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2일
- ③ 2000년 3월 2일, 2011년 5월 1일                      ④ 2000년 4월 1일, 2011년 5월 15일
- ⑤ 2000년 4월 2일, 2011년 5월 16일

9.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    가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    나    )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    다    )만원이다.

- ① 가 : 100분의 40            나 : 100            다 : 50
- ② 가 : 100분의 40            나 : 200            다 : 100
- ③ 가 : 100분의 50            나 : 200            다 : 100
- ④ 가 : 100분의 100          나 : 100            다 : 50
- ⑤ 가 : 100분의 100          나 : 200            다 : 100

10. 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180일            ⑤ 210일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②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 ③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정신적 손해의 전보도 포함된다.
- ④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 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 ② 연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지급한다.
- ③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지급한다.
- ④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⑤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 코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②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 ③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④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 ⑤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 ③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
- ⑤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②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 ③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해야 한다.
- ④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17.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 )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 )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115                      ② 120                      ③ 125                      ④ 130                      ⑤ 135

18.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③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 ④ 사업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②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⑤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①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④ 경매가 개시된 경우
- ⑤ 법인이 분할된 경우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문서로써 고지할 때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납부기한
- ② 납부장소
- ③ 보험료의 납부방법
- ④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 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소멸 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업이 폐업된 날
- ② 사업이 끝난 날
- ③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④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결정·통지를 한 날
- ⑤ 사업주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5.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가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나 )이다.

- ① 가 : 1천분의 30                      나 : 1천분의 11
- ② 가 : 1천분의 30                      나 : 1천분의 9
- ③ 가 : 1천분의 50                      나 : 1천분의 11
- ④ 가 : 1천분의 50                      나 : 1천분의 9
- ⑤ 가 : 1천분의 100                      나 : 1천분의 45



5.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성 비율은 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한다.
- ② 주가수익비율(PER)은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③ 활동성 비율은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측정한다.
- ④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장기채무 지급능력을 측정한다.
- ⑤ 재고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보다 낮은 경우 재고부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나타난다.

6. 주식회사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의 유한책임
- ②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 ③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
- ④ 자본의 증권화
- ⑤ 대규모 자본조달 가능

7. 제품수명주기(PLC)의 단계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입기에는 경쟁자의 수가 적다.
- ② 성장기에는 매출 성장이 빠르다.
- ③ 성숙기에는 이익이 점점 증가한다.
- ④ 쇠퇴기에는 경쟁자의 수가 감소한다.
- ⑤ 쇠퇴기에는 비용지출이 감소한다.

8. 현대적 리더십이론의 하나인 변혁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카리스마
- ② 영감고취(inspiration)
- ③ 지적인 자극
- ④ 개별적 배려
- ⑤ 예외에 의한 관리

9. 현대 경영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효율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 ②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 ③ 행동과학이론에서는 조직 내 비공식조직의 활용을 중시한다.
- ④ 시스템이론에서는 조직을 여러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결합체로 본다.
- ⑤ 상황이론에서는 조직구조가 조직이 처한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고 본다.

10.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 채권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 ② 부채에는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 ③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이다.
- ④ 부채는 상환될 때까지 지급할 금액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다.
- ⑤ 이익 또는 손실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11. 촉진믹스(promotion mix) 중 판매촉진(sales promotion)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      ② 샘플 제공      ③ 가격 할인
- ④ 상품전시회 개최      ⑤ 할인권 제공

12. 기업이 공급사슬관리(SCM)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 ① 운송비의 지속적 감소      ② 글로벌화의 진전
- ③ 아웃소싱의 증가      ④ 공급사슬의 복잡화
- ⑤ 전자상거래 도입의 증가



18.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기업의 유동성                      ② 시장의 경쟁상태                      ③ 새로운 투자기회
- ④ 부채상환의 의무                      ⑤ 기업의 지배권

19.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의 비교·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계적 조직은 직무 전문화가 낮고, 유기적 조직은 직무 전문화가 높다.
- ② 기계적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되어 있고, 유기적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집권화되어 있다.
- ③ 기계적 조직은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하며, 유기적 조직은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에 적합하다.
- ④ 기계적 조직은 통제범위가 넓고, 유기적 조직은 통제범위가 좁다.
- ⑤ 기계적 조직은 지휘계통이 길고, 유기적 조직은 지휘계통이 짧다.

20. 투자안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현재가치(NPV)법에서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 ② 수익성지수(PI)법에서 투자안의 PI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 ③ 내부수익률(IRR)법에서 투자안의 IRR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 ④ 회계이익률법에서 투자안의 회계이익률이 목표회계이익률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 ⑤ 회수기간법에서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21.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 ① 직무급                      ② 연공급                      ③ 직능급                      ④ 업적급                      ⑤ 성과급

22.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적 제휴는 다른 기업들과 특정 사업 및 업무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 ② 해외자회사의 장점은 해외시장에서 많은 자금과 기술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자산들을 해외정부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 ③ 라이선싱(licensing)은 자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외국 기업에게 일정기간동안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국제합작투자의 장점은 기술의 공유, 위험의 분산, 마케팅 및 경영 노하우의 공유 등이다.
- ⑤ 해외직접투자는 기술·자본·상표·경영능력 등 여러 생산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외에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3. 회계시스템에 인식·측정될 수 있는 거래로 분류될 수 없는 것은?

- ① 상품을 구입하다.                      ② 용역을 제공하다.                      ③ 돈을 빌려오다.
- ④ 도난을 당하다.                        ⑤ 계약을 체결하다.

24. 근로자의 임금 지급시 조합원의 노동조합비를 일괄하여 징수하는 제도는?

- ① 유니온 샵(union shop)                      ② 오픈 샵(open shop)
- ③ 클로즈드 샵(closed shop)                      ④ 체크오프 시스템(check-off system)
- ⑤ 에이전시 샵(agency shop)

25. 경영정보시스템(M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MIS는 경영시스템의 하위 시스템 중 하나이다.
- ② MIS는 경영자에게 데이터보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③ MIS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④ 정보는 숫자, 이름 또는 수량과 같이 분석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 ⑤ 정보시스템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정보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제 1과 목 : 노동법 1

1.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②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④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 ⑤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3.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 ①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
- ②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③ 근로자의 과반수
- ④ 근로감독관
- ⑤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②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④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행해지는 시점을 말한다.
- ②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이다.
- ③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 ④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
-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法理)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6.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 ②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그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 ④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 ⑤ 사용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
- ②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 ③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운송회사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제도는?

- 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 ②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2항)
-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 ④ 외근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 ⑤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 ②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며 직종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인 자를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10.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수 없다.
- ②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③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④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⑤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그 근로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11.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 ②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 ③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양수기업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 ④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고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
- ⑤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을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②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 ④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 ② 정리해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15.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 ④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 ④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직업안정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 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③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에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④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5.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주택자금에 대한 융자
- ②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 ③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
- ④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운영
- ⑤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 2과 목 : 노 동 법 2**

1.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 ②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 ③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 ④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②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 ③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 ④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 ⑤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만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
- ④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④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8.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 ②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과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후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 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된다.
-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직전 또는 개시한 직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 ⑤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0.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분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그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③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만료시에 그 협약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⑤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더라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친다.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 ③ 사용자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된다.
- ④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게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 ⑤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게 해당된다.

13.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된다.
-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 ③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 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가 과대하여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14.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 ②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 ③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 ④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인정할 의무가 있다.
- ②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입은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20.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② 단체협약상 유니언 슝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 ③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체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 ④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21.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22.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 ②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 ③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권
- ④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
- ⑤ 긴급조정의 결정권

23.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노사협의회의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2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재를 한다.
- ②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경영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응해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및 제3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은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5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 3과 목 : 민 법

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공인노무사 甲에게 고용된 乙이 제3자의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러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丙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다.
  - ③ 丙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甲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 ④ 甲이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제3자 丁과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의 책임비율 이상을 丙에게 배상하였다면 丁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 있다.

3.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②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 ⑤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 ②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③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 ②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③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⑤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6.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乙이 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 ③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 ②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③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 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③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④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 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②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③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 ④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 ⑤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③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 ④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 자(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 ②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③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 ⑤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16.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 ②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이행보조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 ⑤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18.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 ②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 ③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登記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 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2 :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 중 丙이 무자력이고 丁은 戊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甲이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丁·戊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 ①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                      ②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 ③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④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 ⑤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21.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 ②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22.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②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 ④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3.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 ① 해제                      ② 추인                      ③ 유언                      ④ 취소                      ⑤ 상계

2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 ④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 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25.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① 직무의 분할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②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③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④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30세인 甲은 A회사에 취업한 지 2년 6개월 만에 해고되어 90일간의 구직급여를 받은 후 B회사에 취업하여 1년 6개월간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 그 후 2년간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가 C회사에 취업하여 3년 6개월 만에 해고당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기간은? (A, B, C회사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며, 甲은 적용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없음)

- ① 3년 6개월    ② 4년                    ③ 5년                    ④ 5년 6개월    ⑤ 7년 6개월

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이상일 것

7.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②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
- ⑤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8. 甲은 2000년 3월 1일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A회사에 입사하였다. A회사는 2000년 4월 1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甲은 2011년 5월 1일에 이직하였고, A회사는 2011년 5월 15일에 甲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이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이 순서대로 된 것은?

- ①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1일                      ②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2일
- ③ 2000년 3월 2일, 2011년 5월 1일                      ④ 2000년 4월 1일, 2011년 5월 15일
- ⑤ 2000년 4월 2일, 2011년 5월 16일

9.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    가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    나    )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    다    )만원이다.
--

- ① 가 : 100분의 40            나 : 100            다 : 50
- ② 가 : 100분의 40            나 : 200            다 : 100
- ③ 가 : 100분의 50            나 : 200            다 : 100
- ④ 가 : 100분의 100          나 : 100            다 : 50
- ⑤ 가 : 100분의 100          나 : 200            다 : 100

10. 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180일            ⑤ 210일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 ②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 ③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정신적 손해의 전보도 포함된다.
- ④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 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과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 ② 연금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지급한다.
- ③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지급한다.
- ④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⑤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 코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환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 상실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 ②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 ③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④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 ⑤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자가 아닌 것은?

- ①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 ③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는 자
- ⑤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 ②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 ③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해야 한다.
- ④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17. 다음은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 )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 )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115                      ② 120                      ③ 125                      ④ 130                      ⑤ 135

18.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③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 ④ 사업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②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④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⑤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③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⑤ 체납처분의 목적물에 보험료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①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②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③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④ 경매가 개시된 경우
- ⑤ 법인이 분할된 경우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문서로써 고지할 때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납부기한
- ② 납부장소
- ③ 보험료의 납부방법
- ④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 ⑤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소멸 일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업이 폐업된 날
- ② 사업이 끝난 날
- ③ 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 ④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결정·통지를 한 날
- ⑤ 사업주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5.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가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나 )이다.

- ① 가 : 1천분의 30                      나 : 1천분의 11
- ② 가 : 1천분의 30                      나 : 1천분의 9
- ③ 가 : 1천분의 50                      나 : 1천분의 11
- ④ 가 : 1천분의 50                      나 : 1천분의 9
- ⑤ 가 : 1천분의 100                      나 : 1천분의 45

## 제5과목 : 경제학원론

1. A기업의 생산함수는  $Q=L+2K$ 이다( $Q$ 는 생산량,  $L$ 은 노동,  $K$ 는 자본,  $Q > 0$ ,  $L > 0$ ,  $K > 0$ ). 생산량이 일정할 때 A기업의 한계기술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은?

- 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 ②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 ③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 ④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증가한다.
- ⑤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은 감소한다.

2. 총수요-총공급(AD-AS) 모형에서 장기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기술의 진보
- ② 국내 유전개발로 인한 국내 원유공급량 증가
- ③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
- ④ 대학교육 의무화로 경제 내 인적자본 증가
- ⑤ 정부의 실업자 재훈련정책 시행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 감소

3.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두창비용(shoeleather cost)
- ㄴ.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 왜곡
- ㄷ. 가격조정비용(menu cost)
- ㄹ.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4. 효율성 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관한 설명은?

- 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 균형임금이 효율성 임금이다.
- ②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금협상력이 크기 때문에 협상된 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형성된다.
- ③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의 수익이 증가된다.
- ④ 직업 간의 비금전적인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야 한다.
- ⑤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근로자의 임금이 그렇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과 같아야 한다.

5. IS-LM 모형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한 정액세(lump-sum tax)를 인상하고, 동시에 균형소득을 정액세 인상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효과는?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 소비는 가처분소득만의 증가함수이며, 투자는 이자율만의 감소함수임)

- ①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는 증가한다.      ② 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는 감소한다.
- ③ 소비는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한다.      ④ 소비는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한다.
- ⑤ 소비와 투자 모두 변하지 않는다.

6. 금년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 그리고 원/달러 명목환율(₩/\$)의 하락률이 5%일 때 실질환율의 변화는?

- ① 2% 상승      ② 3% 상승      ③ 2% 하락      ④ 3% 하락      ⑤ 7% 하락

7. 휴대전화를 생산하는 A기업의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다음 표와 같다. 휴대전화 1대당 시장가격이 80,000원이고 근로자 1인당 임금이 200,000원일 경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A기업이 고용할 근로자 수는? (단, 휴대전화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임금이외에 다른 비용은 없음)

근로자 수(명)	1	2	3	4	5	6
휴대전화 생산량(대)	10	18	25	30	33	35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

8.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는 경제에서 두 재화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 표와 같다. 2010년이 기준년도일 때 2011년의 실질 GDP와 물가상승률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구함)

년도	우유 가격(원)	우유 생산량	빵 가격(원)	빵 생산량
2010	1	100	2	50
2011	2	200	2	100

- ① 300원, 100%                      ② 300원, 30%                      ③ 400원, 50%  
 ④ 300원, 50%                      ⑤ 400원, 20%

9.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영(0)이다.  
 ② 유동성 함정구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③ 유동성 함정은 고전학파가 제시한 개념이다.  
 ④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⑤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무한대이다.

10. X재의 시장은 독점이며, 시장수요곡선은  $Q^D=20-P$ 이다( $Q^D$ 는 X재의 수요량, P는 X재의 가격). X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4로 일정할 경우 X재의 독점가격은?

- ① 4                      ② 6                      ③ 8                      ④ 10                      ⑤ 12

11.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②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시장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크다.
- ③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는 재화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 ④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내부화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 ⑤ 거래비용이 없이 협상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12. 적응적 기대가설 하에서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ㄴ.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필립스곡선은 장기에 우하향한다.  
 ㄷ.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ㄹ.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클 경우 물가가 상승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A기업의 단기 생산비용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괄호 안의 값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단, Q는 생산량, TC는 총비용, MC는 한계비용, ATC는 평균총비용, AVC는 평균가변비용, AFC는 평균고정비용, FC는 고정비용)

Q	TC	MC	ATC	AVC	AFC	FC
3	60	-		( ㄱ )	10	30
4		( ㄴ )	18			30
5		( ㄷ )		11		30

-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ㄱ < ㄷ      ③ ㄱ < ㄷ < ㄴ  
 ④ ㄷ < ㄴ < ㄱ      ⑤ ㄷ < ㄱ < ㄴ

14. 甲은 항상 1:2의 비율로 X재와 Y재만을 소비한다. X재의 가격이  $P_X$ , Y재의 가격이  $P_Y$ 일 때 甲의 X재에 대한 엔겔곡선(Engel Curve) 기울기는? (단,  $\text{기울기} = \frac{\text{소득변화}}{\text{주요량변화}}$ )

- ①  $2P_X$       ②  $3P_Y$       ③  $2P_X + P_Y$       ④  $P_X + 2P_Y$       ⑤  $\frac{P_X}{2P_Y}$

15.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펜재의 가격변화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② 기펜재의 가격상승시 소득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③ 기펜재의 가격하락시 대체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④ 기펜재는 반드시 열등재이다.  
 ⑤ 기펜재의 가격상승시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16.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팀별 발표의 경우 팀의 구성원 중 일부는 발표 준비를 게을리 한다.  
 ② 에어백을 설치한 후 자동차의 운전자는 설치 이전 보다 부주의하게 운전한다.  
 ③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자는 가입 이전 보다 화재방지 노력을 게을리 한다.  
 ④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차입하려 한다.  
 ⑤ 성과급 제도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태만하게 근무한다.

17. 기업 A와 B는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 또는 소규모 투자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에 참여한다. 본 게임은 1회만 행해지고 다음과 같은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갖는다. A기업의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과 내쉬(Nash)균형의 보수조합은? (단, 다음 괄호 안의 왼쪽 값은 A기업의 보수, 오른쪽 값은 B기업의 보수를 나타냄)

연구개발투자		B기업	
		대규모	소규모
A기업	대규모	(40, 30)	(60, 20)
	소규모	(20, 40)	(50, 50)

- ① 대규모, (40, 30)      ② 소규모, (20, 40)      ③ 대규모, (60, 20)  
 ④ 소규모, (50, 50)      ⑤ 없음, (50, 50)

18. 불완전경쟁 시장구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적 경쟁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②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독점시장에서 독점가격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③ 쿠르노(Cournot)모형에서 각 기업은 경쟁기업이 현 산출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동한다.  
 ④ 베르뜨랑(Bertrand)모형에서 각 기업은 경쟁기업이 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동한다.  
 ⑤ 슈타켈버그(Stackelberg)모형에서 두 기업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가격에 관해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19. 완전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이  $L = 2,000 - w$ 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 = -2,000 + 3w$ 이다( $w$ 는 근로시간당 임금,  $L$ 은 근로시간). 근로시간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 ① 125,000원      ② 250,000원      ③ 375,000원      ④ 500,000원      ⑤ 750,000원

20. 금년도 국내총생산(GDP) 산출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은?

- ① 전년도 생산된 중고 자동차를 매입
- ② 국내기업 소유의 해외공장에서 금년도 생산된 자동차 판매
- ③ 본인이 소유한 논에서 금년도 직접 생산한 쌀을 자신이 소비
- ④ 전업주부의 금년도 가사활동
- ⑤ 홍수로 유실된 도로를 정부가 금년도 복구

21. 새 케인즈(new Keynesian)학파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폐는 중립적(neutral)이다.
- ② 임금과 물가의 경직성(rigidity)이 있다.
- ③ 가격조정비용(menu cost)이 존재한다.
- ④ 가격협상에 대한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가 존재한다.
- ⑤ 총수요의 외부효과(aggregate demand externality)가 발생한다.

22. 이윤을 극대화하는 H기업의 생산함수가  $Q = AK^\alpha L^\beta$ 이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이다( $Q$ 는 생산량,  $A$ ,  $\alpha$ ,  $\beta$ 는 상수,  $A > 0$ ,  $0 < \alpha < 1$ ,  $0 < \beta < 1$ ,  $K$ 는 자본,  $L$ 은 노동을 나타내고,  $Q > 0$ ,  $L > 0$ ,  $K > 0$ ). H기업의 총수입에서 자본분배율과 노동분배율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기업의 총수입과 총생산액은 일치함)

- ① 자본분배율:  $A\alpha$ , 노동분배율:  $A(1-\alpha)$
- ② 자본분배율:  $\alpha$ , 노동분배율:  $(1-\alpha)$
- ③ 자본분배율:  $\beta$ , 노동분배율:  $(1-\beta)$
- ④ 자본분배율:  $A\beta$ , 노동분배율:  $A\alpha$
- ⑤ 자본분배율:  $\beta$ , 노동분배율:  $\alpha$

23.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C(Q) = 3Q^2 + 24$ 이다(Q는 생산량,  $Q > 0$ ). A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이 24일 경우 A기업의 극대화된 단기 이윤은?

- ① 21                      ② 24                      ③ 36                      ④ 42                      ⑤ 51

24. 노동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함)

ㄱ.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로봇의 이용 증가  
ㄴ.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진보  
ㄷ. 노동을 대체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히스-마샬(Hicks-Marshall)의 파생수요법칙에서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산될 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임금탄력성은 커진다.  
ㄴ. 노동이 다른 생산요소와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탄력성은 커진다.  
ㄷ. 임금탄력성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작아진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